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의 불발... 공은 정부·국회로

노·사·공의 밤샘 협상에도 이견차 현 제도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될 듯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가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정부와 국회 및 노사 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됐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 제도로 결정될 것 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6일 오후 비공개로 노·사·공의 2명씩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과 관련해 밤샘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7일 오전 6시 경 합의 도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출 실패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위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는 종료됐다”며 “7일 예정된 제4차 전원회의는 열리지 않으며, 그간 제도개선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

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의 활동은 4월 23일까지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

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다.

경영계도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범위에 정기적인 상여금과 복리후생 지원금을 포함할 것을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합의가 불발되자 최저임금위는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고용부에 넘기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노사 단

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영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며 “또한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유구무언”... 與, 안희정 성폭행 의혹에 지방선거전 진땀

젠더폭력대책특위 구성·활동에도 민주당 인사들 성폭행 의혹 줄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3개월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감힘을 쓰는 모양새다.

하지만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을 준비 중인 정봉주 전 의원과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의 성추행·성폭력 의혹 등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폭로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이들 의혹에 대해 또 다시 고개를 숙였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구무언(有口無言)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우리 당은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공원에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의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 돌연 연기되자 캠프 관계자가 의자를 정리하고 있다. 정 전 의원 측은 이날 오전 보도된 성추행 보도와 관련해 입장 정리가 필요해 기자회견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6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만장일치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젠더폭력대책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돌입했으며, 조만간 젠더폭력신고센터를 설치해 우리 주변에 성폭력 신고나 제보가 있다면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 후보들에 대해 도덕성과 성평등의식 등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성평등의식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계획도 밝혔다.

우 원내대표도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을 드렸다. 참으로 면목이 없다”면서, “이번 사안을 우리 사회의 왜곡된 문화와 관행, 의식을 바꿔야 할 엄중한 계기로 삼겠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편에 서서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부당한 위계, 권력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고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추미애 대표와 당 지도부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있다”며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며 성폭력의 피해를 막는 일에 우리 사회 모두가 위드유(with you)를 함으로써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회복할 때 비로소 실질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음을 말씀드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과와 함께 당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한 수습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냈다.

전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안 전 지사의 제명을 결정한 데 이어 이날 민주당

은 선거기획단 회의와 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힌대로 성 관련 범죄 처벌 전력자는 물론 연루 사실이 확인된 사람도 6·13 지방선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침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의 발빠른 수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성추행·성폭행 의혹이 연이어 불거졌다.

이날 지난 2011년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을 향해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한 여성의 폭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정 전 의원은 이날 예정됐던 서울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되기도 했다.

또한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는 성폭행·성추행 의혹에 휘말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의혹 폭로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분위기가 일고 있어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野, 지방선거모드 전환했지만... 내부갈등·인물난에 곤혹

자유한국, 서울시장 후보도 못찾아

야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전환했지만 인물난으로 어려움에 빠진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당내 구성원간 법적 다툼과 이에 따른 예비 후보자들의 탈당 등 내부갈등도 곳곳에서 관측되면서 야당 지도부들은 고심에 빠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높은 정당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인제가 물리고 있는 반면, 민주당 지지율의 절반 이하인 야당들은 심각한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장 후보자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지방선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장 후보는 단순히 하나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서울 시장 후보에 대한 여론은 지방선거 전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선 지방선거들에서 각 정당은 서울 시장 후보에 이른바 ‘간판 스타’를 등판시켜왔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서울 시장 후보

로 홍정욱 헤럴드 회장을 자(自)당의 서울 시장 후보로 출마하도록 공을 들였지만, 홍 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보수진영 결

집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이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광역단체장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외에는 후보군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으며 기초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등은 더욱 인물난이 심각하다.

이같은 분위기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두 정당 모두 지지 지역구 상당 부분이 민주당과 겹치는 상황에서 낮은 당 지지율로 인재들이 합류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의석수도 적어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결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두 정당의 지도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타개할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인물난 속에서도 야당 후보들간의 내부갈등도 관측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민식 전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의 ‘악의적인 여론조사’를 문제삼으며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과정에서 YDI가 여의도연구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홍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김 원장도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